

‘준평화체제’로서의 한반도 정전체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1. 정전체제와 평화

김명섭 교수의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는 6·25전쟁 이후 구축된 정전체제에 대한 매우 훌륭한 연구입니다. 정전협상 회의록을 비롯한 방대한 당대의 국제적 1차 사료들과 2차 문헌들을 섭렵함으로써 1953년 조선/한국 정전체제의 탄생을 역사정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및 용어 설명
 - 1) 문제 제기
 - 2) 용어 설명
2. 참고 자료
3. 선행 연구

제2장. 전쟁의 발발과 정전의 모색

1. 전면전쟁 시기의 정전 모색
2. 정전협상 장소와 의제에 관한 설전

제3장. 정전협상 막전막후(幕前幕後)의 인간들

1. 막후(幕後)의 인간들 1) 국제연합군 대표단의 막후 2) 조-중인민군 대표단의 막후
2. 막전(幕前)의 인간들 1) 국제연합군 협상대표단 2) 조-중인민군 협상대표단

제4장. 공간: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1.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 해상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제5장. 시간: 평화 및 정전을 어떻게 실현하고 지속할 것인가?

1. 정전기간 중 군사력 증강문제와 소련 중립국론
2.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
3. 정전 후 정치협상 개최문제

제6장. 인간: 포로와 실향사민들을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

1. 6.25전쟁포로문제의 성격
2. 제네바협약과 전원송환원칙
3. 1:1교환의 모색
4. 자유송환원칙의 확립과 ‘포로전쟁’

5. 포로송환에 대한 이견과 전쟁의 지속

제7장. 전쟁 중의 정치

1. 부산과 워싱턴의 권력 재편 519

2. 평양과 모스크바의 권력 재편 536

제8장. 정전협상의 종결과 정전체제의 탄생

1. 스탈린 사망 이후의 대전환

2. 송환된 포로와 남겨진 ‘실향사민’

3.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쌍생(雙生)

4. 한국군의 정전협정 당사자성

제9장. 정전과 냉전

1. 제네바정치회의와 이를 수 없는 평화

2.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

제10장. 결론

그는 위의 책, p. 6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조약 없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停火상태(the longest ceasefire without a peace treaty)”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면서 이를 ‘상대적 평화’로 보는 학계 일각의 소수설에 주목했다. 그러나 그가 말했듯이 대다수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불안하다면서 이를 평화협정에 기초한 평화체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는 한반도 정전체제가 ‘상대적 평화’를 제도화한 ‘준평화체제’라고 생각한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cold war)’이 ‘온화(溫和; warm peace)’보다는 못했지만 ‘열전(hot war)’보다는 나왔듯이 냉전시대에 형성되고 탈냉전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보다는 못했지만 열전(hot war)보다는 나왔다. 김명섭 교수가 인용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하고 있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전쟁을 하고 있는 시간들의 연속”[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 6]이므로 지정학적으로 냉전체제의 최첨단이었으며 탈냉전기 G2시대 미·중의 교차점인 한반도가 이 정도로 안정적인 것은 거의 평화체제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코리아와 동유라시아(Eastern Eurasia)의 영구평화를 위한 도정은 조선/대한민국 정전체제의 맹목적 폐기가 아니라 보존(conselve), 폐기(abandon), 초월(transcend)이 함께 이루어지는 揚棄(止揚; aufheben)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전체제이거나 휴전체제이건 ‘전시체제’가 아니라 ‘준평화체제’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은 고전적인 정전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포로교환, 민간인 귀환 등의 문제를 규정했으므로 평화조약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 이는 협정을 통해 외국군대 철수 등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했던 공산측의 입장을 반영했던 결과였지만 말이다.²⁾ 따라서 꼭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평화가 구축될

1)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p. 15, 758.

수 있다는 신화에서 헤어 나올 필요도 있다. 더 이상 준전시체제라고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업전선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일반인들은 없을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이 평화의 선결조건이라는 북의 선전에 너무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종전이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60년 동안 전쟁재개가 선포된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평화를 구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4자 평화회담과 그 무용론

카터의 1994년 방북으로 인해 1994년 7월 25일로 예정되었던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은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 김일성 사망으로 불발되었지만 2000년 6월 13일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2000년 10월 23일 미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방북했다. 또한 카터 재임시인 1979년 박정희와의 정상회담 시에 제의된 3자회담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채택-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구현되었다. 이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혀있다. 여기서 4자정상회담은 남, 북, 미, 중 정상회담이며 3자는 중국이 제외된 것이고 서울이나 평양 혹은 금강산, 개성, 제주도 등 한반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발표된 9·19 공동성명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연단)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이미 명시되었는데 이는 3자 혹은 4자 평화회담을 의미한다. 결국 10·4 선언과 9·19 성명에 의하면 2012년이나 2013년에 6·25전쟁을 종전시키고 평화체제 구축을 선언할 4자정상평화회담이 한반도 지역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6자회담에서 합의했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한 남·북·미·중 간의 4자 평화회담 개최는 당면과업의 하나이다. 아물지 않은 전쟁 상처를 안고, 긴박한 전쟁위험을 느끼며 60여 년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회담만큼 절박한 과업은 없다.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 4자 평화회담을 가시권 안으로 끌어당긴 것은 2011년 7월 28일과 29일 뉴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서 열린 북미 양자고위급회담의 성과라는 지적이 있었다(2011년 10월 13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이후 보스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전 주한미대사]의 방북[2009년 12월 8-10일 방북했었음]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무산되었음). 4자 평화회담은, 아직 종전을 하지 못한 정전상태에 있는 신흥 핵보유국과 최대 핵보유국의 협상을 중심으로 열릴 역사적인 평화회담이며, 4자 정상

2) 전미영,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진화 가능성과 전제조건,” 이서행 (외), 『분단 재조명: 대립과 갈등을 넘어 통합·번영방안』 (서울: 백산서당, 2009), p. 257.

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역사적인 정치회담이 될 수 있었다. 또한 4자 평화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김계관 제1부상의 뉴욕 초청을 공식화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1년 7월 24일자 성명에서 “우리(미국을 뜻함-옮김)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시간 끄는 협상 (protracted negotiations)에 대해 우리는 흥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미국이 4자 평화회담 개최문제를 놓고 북측과 지루한 협상을 벌일 생각이 없음을 말해준다고 해석되었다 (그렇지만 2007년 9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도 시드니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서명하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면서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미국의 발언이 수사일 가능성도 있었다. 한편 10.4선언은 위 부시의 전언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가 2012년 11월 대통령선거 이전에 미국 유권자들에게 꺼내놓을 가장 큰 외교성과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열리는 4자 평화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미국만 4자 평화회담의 신속한 개최를 요망하는 게 아니라, 북측도 4자 평화회담 개최문제를 놓고 미국과 지루한 협상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있었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에 역사적인 4자 평화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려는 북측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다. 북측과 미국의 그러한 내부사정은 4자 평화회담이 머지않아 단 한 차례 열리는 것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4자 정상들이 몇 차례 걸쳐 회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데 반복대결정책을 견지하던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집착하며 4자 평화회담을 반대하다 4자평화회담 혹은 북미양자회담이 성사되면, 치명타를 입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변화에 따라 이명박 정부도 반복대결정책에서 남북대화 추구로 전환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었다.³⁾

대한민국 정부도 2012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2012년 남북미중4자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아니면 2013년 정전 60주년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뉴욕 김계관 북한 외무상 제1부상-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W. Bosworth)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회담 직전인 2011년 7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두 시간 동안 만났다(9월 21일 북경에서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 개최). 이러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리게 되자 미국이 북미 양자회담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되었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대화 제안이 있었던 1974년 3월부터 미국은 양자대화는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핵문제는 미국과의 대화 의제일 뿐 남한과는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없다던

3) 한호석, “한반도 평화회담 준비한 북미 고위급회담,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168),” 『통일뉴스』, 2011년 08월 01일 (월) 07:33:5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21#top>; “북미 고위급회담과 평화협정,” <http://kr.blog.yahoo.com/scottieha/139> (검색일 2011년 9월 18일).

북한이 다소 변화된 양상을 보여 남북비핵화회담에 응했다고 할 수 있었다.

핵무장을 포기한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 종식으로 북한의 자위적 핵무기 보유 의지가 더 강해진 상황에서 2011년의 실현가능한 과제는 북의 수평적 핵확산(핵수출)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했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11년 3월 2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구상에 강권과 전횡이 존재하는 한 자기 힘이 있어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는 진리가 다시금 입증됐다"고 밝혔다.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2003년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HEU)을 포함한 모든 핵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이 요구한 검증(사찰)방안을 수용했다. 미국은 카다피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북한을 향해 '선(先) 핵포기'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1년 10월 21일 에모리대학을 방문했던 북한사절단의 리종혁 단장은 북의 최종목적은 핵무장화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북에 대한 위협이 있고 남쪽에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므로 북은 핵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불신이 해소되고 신뢰가 마련된다면 비핵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것처럼 공평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북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⁵⁾ 물론 이는 선전적 언명이며 과연 미국이 북한과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비핵화의 길이 열릴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가의 인정을 받은 후에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반도의 경우 1953년 정전협정이 60여 년간 유지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1973년 1월 27일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베트남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된 '파리평화조약'⁶⁾의 예와 같이 불필요한 평화협정 체결이 오히려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평화협정 자체가 반드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균형과 평화협정의 이행과 준수를 담보하는 국제적 보장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다.⁷⁾

1953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면 평화협정에 북한의 핵 개발 포기 또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상호방

4) 장용훈, “北 리비아 공습 비난...”자위력이 전쟁 막아,” 『연합뉴스』, 2011년 3월 22일,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110322010400038 (검색일 2011년 10월 22일).

5)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사말,” 에모리대학교 우드러프 도서관, 2011년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6) ‘베트남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이 정식명칭이다.

7) 허문영·김수암·여인곤·정영태·조민·조정아, 『한반도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287.

위조약 폐기, 민족자결권 존중 등이 포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베트남과 같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⁸⁾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를 노린 전술·선전일 뿐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런데 1960년대 말 미중화해 국면에서 이루어진 중일국교정상화과정에서 중일평화우호조약(Sino-Japanese Peace and Friendship Treaty; Sino-Japanese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Japa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1978)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차원[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일본어: 日本との平和條約) 조인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영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로 초대받지 못했으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초대받지 못했다]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전쟁의 종결과정에서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거처야 할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6년 5월 6-7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7차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대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미국을 향해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을 주장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김정일 시대' 때도 거의 요구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것이었다. 기존의 通美封南전술에서 通南封美전술로 변화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⁹⁾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미군철수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평화협정은 미군철수를 노린 카드'라는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주장에다가 '평화협정 무용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남북과 미(혹은 중국 포함)가 심도 있게 논의할 때 만약 북한이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고집하고 그것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전제조건으로서의 미군철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후에 정 합의할 수 없다면 협상을 중단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평화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관론에 치우친 예단이며, 대화무용론일 것이다. 이러한 비관론을 견지한다면 적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며 남북한 사이에는 어떤 건설적 논의도 할 수 없게 된다.

3. 6·25전쟁이나 한국전쟁이나?

8) 이기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연 필요한가?"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16년 4월 19일, <http://asaninst.org/contents/%ED%95%9C%EB%B0%98%EB%8F%84-%ED%8F%89%ED%99%94%ED%98%91%EC%A0%95-%EC%B2%B4%EA%B2%B0-%EA%B3%BC%EC%97%B0-%ED%95%84%EC%9A%94%ED%95%9C%EA%B0%80/> (검색일: 2016년 4월 20일).

9) 김호준, "<北당대회> 김정은 남북회담·미군철수 주장 .. '통남봉미' 전략인가(종합): 남에는 심리전 중단·남북군 사회담 제안하며 평화공세 美에는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 떼야" .. 전문가 "한미동맹 균열 노린 듯" 정성장" 차기 정부 염두에 두고 유화적 대남 입장 표명 했을수도" 주장," 『연합뉴스』, 입력 2016.05.08. 16:09 | 수정 2016.05.08. 16:09,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508160944906> (검색일: 2016년 5월 8일).

1) 6·25전쟁은 보수진영의 용어라는 진보진영의 흑백논리와 그 비판

‘언어는 존재의 집(Language is the house of the Beings)’이라는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말¹⁰⁾이나 공자의 ‘正名’¹¹⁾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본질과 내용이 그 용어[언어]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다.¹²⁾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다루려는 이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정의했을 때 우리 학계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듯 용어 문제는 매우 뜨거운 이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오랫동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케케묵은 것이다.

이 전쟁의 명칭은 크게 ‘6·25전쟁’이나 ‘한국전쟁’이라는 양론으로 집약되어 있다.¹³⁾ 국제학계에서는 ‘Korean War,’ 일본에서는 ‘朝鮮戰爭’이라고 통용되며 한국의 정치학계와 국제정치학계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 용어인 6·25전쟁은 공식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도 이 명칭을 통용하고 있다.¹⁴⁾ 한편 두 용어를 혼합한 ‘6·25한국전쟁’도 있다.¹⁵⁾

김학준 교수는 6·25전쟁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서 상대적으로 어울린다고 주장했다.¹⁶⁾ 서동만 교수의 경우 6·25전쟁이 가장 적합하지는 않지만 한국전쟁은 잘못된 명칭이므로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약칭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남북이 모두 당사자였던 이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던 것이다.¹⁷⁾

10) "Vielmehr ist die Sprache das Haus des Seins, darin wohnend der Mensch existiert, indem er der Wahrheit des Seins, sie hütend, gehört." Martin Heidegger, "Brief über den Humanismus"(1946), *Gesamtausgabe*, Bd. 9: *Wegmarken*[하이데거 전집 9권]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6), p. 333.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그 집에 거주한다. ... 언어 속에서 존재의 드러남이 일어난다. ... 언어의 힘 안에서 인간은 존재의 증인이 된다. ... 인간은 존재의 파수꾼이다.” 하이데거의 *A dialogue on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1971)에서 인용함. 이 책에는 *Unterwegs zur Sprache*[*On the Way to Language*] (1959)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는 언어를 통해 인간에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언어는 인간의 존재를 드러낼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1) 『論語』, 子路 3에 나오는 孔子의 주장으로 “반드시 이름을 바로 해야 한다.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언어가 순리로 통하지 않고 언어가 순리대로 통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성사되지 않는다(必也正名乎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는 것이다.

12) 박명림, “한국전쟁/6·25를 기억하는 방식: 역사용어와 사유체계의 문제,”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서울: 역사비평사, 2006). pp. 176-196에서는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6·25나 한국전쟁이냐로 달리 쓰인다고 주장된다.

13) 박명림, “한국전쟁/6·25를 기억하는 방식: 역사용어와 사유체계의 문제,”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서울: 역사비평사, 2006). pp. 176-196.

14) “6·25전쟁50주년,” 『조선일보』, 2000년 4월 20일. 이에 비해 『한겨레』는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15) 류재갑 교수의 명명이며 김행자, 『6.25 한국전쟁사』, 1 (동부전선) (서울: 에세이, 2010)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 6·25 Korean War로 번역되었다. 또한 1989에 대륙연구소에서 간행한 『군과 나: 한국 첫4성장군 白善燁 6·25한국전쟁 회고록』과 이를 재간행한 백선엽, 『군과 나 (6·25 한국전쟁 회고록)』(서울: 시대정신, 2009)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16) 김학준, “6·25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 pp. 26~41.

17)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p. 53.

김명섭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6·25전쟁을 선호했다.¹⁸⁾ 그는 전쟁 발발 시점에서 따온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1939년 소련과 핀란드 간 '겨울전쟁'처럼 전쟁을 겪은 민중의 경험이 온축되어 있어 가장 객관적인 명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⁹⁾ 당시 민중들은 6·25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사변이나 동란이나 전쟁이냐는 것은 다음다음 문제였다.

국제학계의 통칭인 Korean War의 직역할 때 우리는 한국전쟁이라하며 북한과 일본²⁰⁾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하는 등 명칭 면에서 그 齊一性을 기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6·25가 보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전쟁인지 동란인지, 아니면 북에서 주장하듯이 해방전쟁인지 그 성격을 명시하지 않고 발발 날짜만 달랑 쓰는 것은 그 사건의 성격 규정을 회피하고 중성화한 것이라고 비판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6·25라는 통칭에다가 그 성격을 명시하여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날짜 혹은 연도로 지칭(10·26[사건], 4·19)하거나 날짜 혹은 연도를 앞에다 명기하는 식(4·19혁명)은 우리의 전통적 방식이기도 하고 서양에서도 그런 방식(9·11테러; 9/11 attack)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서양에서 전쟁의 명칭을 발발일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9·11과 같이 개별적인 사건의 경우 일어난 날짜를 명칭으로 사용해 그 날을 기념하는 한다. 이 경우는 사건이 대개 그날에 끝났으며 6·25처럼 장기화되었던 케이스는 아니다.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명섭 교수는 프랑스의 1830년 7월혁명,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용례를 통해 반박했다.²¹⁾

또한 진보적 진영에서는 6·25가 보수적 명칭이라고 비판한다.²²⁾ 냉전적 명칭이며 증오와 분단을 내포하는 단세포적 용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양분법·흑백논리에 벗어나는 사례도 많다. 일본 조총련계에서는 6·25전쟁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²³⁾ 또한 북한에서 제작한 대남선전용 매체에서도 대한민국의 통칭인 6.25전쟁이

18) 김명섭,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전쟁학회 학술회의 발표문, 2006년 3월 31일, pp. 3-4; 김명섭, “냉전의 종식과 연구의 열전,”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p. 1~2.

19) 김명섭, “전쟁 명명(命名)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제2호 (2009년 2월), pp. 71-98.

20) 일본이 조선전쟁이라고 명명한 것은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하는 등 한국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지식인과 사회 일반의 명명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지배했던 식민지 조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조선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21)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p. 61-62. 그는 the Korean War 등과 같은 영어명칭을 번역해야 할 때는 ‘코리아전쟁’이라는 명칭을 쓸 것이라고 적었다.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 64.

22) 1994년 3월 교육부가 6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 개정을 위해 마련한 ‘국사교육 내용 전개 준거안’ 연구보고서 시안인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이 보고서를 통해 ‘6·25 전쟁’을 ‘한국전쟁’으로, ‘대구폭동’과 ‘제주도 4·3사건’을 각각 ‘항쟁’으로 기술할 것을 제시했다. 서중석의 연구 부분이 지나치게 좌편향적이란 언론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최종 확정된 준거안은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준거안 파동’이다.

23) “6.25전쟁의 도발자는 누구인가?” 『조국』 (2000년 6월).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²⁴⁾ 한편 2000년 6월 24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Korean War)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으며 미군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참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000년 6월 27일 즉각적 담화를 통해 6.25조선전쟁은 미국이 도발한 것이며 이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²⁵⁾ 이 담화에서 그들이 사용해 오던 ‘조선전쟁’이나 ‘조국해방전쟁’을 ‘6.25조선전쟁’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채롭다. 이렇듯 북에서도 6·25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물론 6·25전쟁이라고 직접 호칭하지는 않고 조선전쟁 앞에 6·25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2) 한국전쟁이라는 말의 비주체성과 그 제한성

우선 195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이래로 우리가 이를 부르는 명칭은 6·25[동란, 사변, 전쟁]였으며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은 외래명이다.

또한 한국전쟁과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전쟁, 영국전쟁, 미국전쟁이라는 말이 가능한데 남의 나라면 모르되 어느 나라도 자기네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혹은 내전)을 이렇게 남의 나라 전쟁처럼 부르는 용례는 별로 없다.²⁶⁾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말이다. 또한 어떤 교전국 일방이 싸웠던 상대방 국가나 싸웠던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미국이 'Korean War'라고 부를 때는 한국인과 싸운 전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 보다 정확하게는 North Korean War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 한국에서 싸운 전쟁이라면 Vietnam War나 Iraq War같이 Korea War로 적어야 했다. Korean War는 한국전쟁(Korea War)이 아니라 '한국인의 전쟁' 혹은 '한국[에서]의 전쟁'이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역 이름이 우리 지역을 포함하므로 굳이 한국을 붙일 필요는 없으며 교전대상인 북한인을 지칭해 ‘북한전쟁’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다).

즉 아테네인은 기원전 5세기 초반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을 페르시아전쟁이라고 불렀다.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에 침략했기 때문

24) 『실록 6.25전쟁: 아메리카는 굴복하였다』 ([평양], 1993). 이 책은 평양에서 대남선전용으로 제작해 살포한 것이다. 북한에서 쓰는 책은 자신들의 자료와 중국문헌을 각주로 다는데 비해 이 책은 남한에서 나온 문헌들이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남한을 잘 아는 대남선전기구에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북에서 쓰는 ‘영도’ 대신 남한식 두음법칙에 의거해 ‘영도’라고 쓴 것으로 보아 전적으로 남쪽을 겨냥한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25) 『조선중앙방송』, 2000년 6월 28일; 『평양방송』, 2000년 6월 28일; “논평: 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로동신문』, 2000년 7월 3일; 남광식, “북한, “6.25남침 발인 북-미 대화에 찬물,” 『연합뉴스』, 2000년 7월 3일; 『매일경제』, 2000년 7월 4일 1면;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493호 (2000년 7월 3일), p. 17;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494호 (2000년 7월 10일), p. 37.

26) 조동걸, 『현대한국사학사』 (서울: 나남, 1998), p. 481. 남정욱, “6·25를 한국전쟁이라 부르는 이들, 그럼 임진왜란은 한일전쟁,” 『조선일보』, 2013년 6월 15-16일 B5면에서는 6·25를 당사자가 아닌 국외자가 사용하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제3자적 시각은 주체가 스스로 제3자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신분열’이라는 악평까지 들어야만 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공화국이라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대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호칭을 부르는 것은 적과의 대화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에 이렇게 부른다(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위대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를 유린하고 아테네를 불태우고 개선하였다"면서 마라톤 평원의 패배 따위는 작은 패전으로 묘사했다. 이렇듯 페르시아 쪽에서는 이 '기분 나쁜' 명칭을 쓰지 않는다. 일본 교토대학 문학부 교수인 스키야마 마사아키는 '페르시아-그리스 전쟁'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동맹 세력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동맹 세력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펠로폰네소스전쟁이라고 불린다. 당시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델로스전쟁 혹은 아테네전쟁으로 불렀을 것이다.²⁷⁾ 또한 미국은 1846년 발발한 멕시코와의 전쟁(1846. 4~1848. 2)을 '멕시코전쟁'(the Mexican War)²⁸⁾이라며 자신의 나라 이름은 빼고 싸운 상대방 사람들을 지칭했지만²⁹⁾ 멕시코는 1847년 전쟁(Guerra de 1847) 혹은 멕시코·미국 전쟁(Guerra de Mexico a Estados Unidos)이라고 부르지 남의 나라 전쟁처럼 멕시코 전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멕시코인과·미국인과의 전쟁'[The Mexican-American War]이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도 하며 '미국침략전쟁,'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인 제임스 포크에서 따서 '포크의 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이 전쟁밖에 없지는 않다. 전쟁의 발발 시기나 연도 등을 명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 한편 미국 사람들이 이미 1871년 신미양요를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불렀으나,³⁰⁾ 미국에서 수정주의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던

27) 한정숙, "역사용어를 바로 써야 하는 이유,"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서울: 역사비평사, 2006), p. 9.

28) 앨런 브링클리(Alan Brinkley),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Unfinished Nation) 2: 하나의 미국-남북전쟁에서 20세기 초까지』, 황혜성 (외역)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p. 80-81.

29) 1840년대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로 미국인들이 이주하자 멕시코 정부는 미국인들이 개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정착을 허락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멕시코인들보다 인구가 많아지자 독립을 선언했고 텍사스공화국을 세웠다. 멕시코와 싸워 독립을 인정받은 텍사스공화국은 미국 연방에 가입했다. 텍사스 합병 소식이 알려지자 멕시코는 미국과 국교를 단절했다. 미국의 포크(James Knox Polk) 대통령은 1846년 멕시코 국경에 미군 3,500명을 파견해 멕시코를 자극했다. 결국 1846년 5월 전쟁이 일어났고 또 다른 멕시코 영토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인용하게 했다. 신의 축복을 받은 미국은 세계를 미국식 민주주의로 문명화시키기 위해 계속 팽창해야 하고, 그것은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신의 섭리에 따른 미국의 운명은 대륙전역[나아가 세계전역의 모든 사람과 지상의 모든 공화국에게로]으로 팽창하는 것이라는 많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를 표현한 용어이다. 이 말은 미국팽창주의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단골메뉴가 되었다. 결국 미국은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전체 정치에 사형선고를 내린다는 명분으로 수행했던 1846-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 결과 멕시코와 조약을 맺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유타 등 서부 지역을 빼앗아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므로 진정한 대륙국가가 될 수 있었다(미국은 미국 시민에게 진 멕시코 정부의 빚을 미국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테다가 돈으로 이 지역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그 돈이 1,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므로 전쟁의 결과로 멕시코 영토 절반 이상을 빼앗은 것이었다). 멕시코는 '명백한 운명' 사상에 따라 "앵글로 색슨족의 월등한 기력에 융합되거나 굴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에 있다"고 주장되었다. 최웅·김봉중, "해외팽창," 『미국의 역사』, (서울: 소나무, 1997), 212쪽. 이 전쟁은 영토확장을 위한 미국의 제국주의전쟁이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국의 이름을 빼고 명명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30) 『뉴욕타임스』 1871년 8월 22일자에 이렇게 불렀다. "The Korean War," New York Times, Vol. 20, No. 6215, August 22, 1871. 한편 1950년 전쟁이 발발한 후 the Korean War에다가 수식어를 첨가해 'the First Korean War' 내지는 'the Korean War of 1871'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는 'the 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으로 통용되며 'the Korean Expedition in 1871,' 'the 1871 US Korea Campaign'으로 불린다. Kim Young-Sik, "The early US-Korea relations: Excerpt from "A Brief History of the US-Korea Relations Prior to 1945," 7/25/2003, <http://www.asianresearch.org/articles/1462.html> (검색일 2010년 9월 6일). 한편 1871년 당시 미국에서는 "미개인들과의 조그만 전쟁"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경원, 『미국,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합동, 2003). 또한 "미국의 전쟁사상 가장 작은 전쟁"이라

1970년대 이후 1950년대의 전쟁을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지칭하는 것이 전사학자들이 쓰던 한국갈등(Korean Conflict³¹) 혹은 한국위기; the Korean Crisis)이라는 표현 보다 일반화 되었다[한편 미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 미군을 투입한 뒤에 전쟁이라는 표현 사용을 거부한 채 “유엔에 주도 아래 행해지는 치안 행위”라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³²] 그는 전쟁 대신 갈등(conflict)이라고 썼다³³]. 한편 임진왜란을 Korean War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미국과 한국인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으므로 Korea War가 더 정확하다.³⁴

그런데 Korean War는 한국정부나 한국인들이 배제된 미국식 용어라는 위와 같은 평가도 있는 반면 남북한 간의 (한국인들끼리의) 전쟁을 연상시키므로 국제전적 성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엇갈린 평가도 있다(또한 오히려 Korean War의 번역어인 한국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한국[대한민국]이 북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혹은 한국[남·북]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과 정반대되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북한에 의한 남침을 희석시키는 용어라는 평가도 있다). 그렇다면 유럽평화대학의 요한 갈통(Johan Galtung) 교수의 표현대로 War in Korea(한국에서의 전쟁)가 더 포괄적이다. 전쟁이 일어난 곳은 한반도지만 전쟁의 주체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전쟁’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베트남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라는 명칭의 경우도 미국이 베트남 및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표기했듯, ‘베트남에서의 전쟁(War in Vietnam)’ 및 ‘이라크에서의 전쟁(War in Iraq)’이라고 써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³⁵)(그런데 베트남전쟁은 Vietnamese War가 아니라 Vietnam War,³⁶) 이라

고 평가되기도 했다. 신봉승, 『나라를 세웠으면 역사를 고쳐야지: 흐름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 (서울: 가람기획, 2006), p. 242. 한편 우리 입장에서는 ‘양요’라는 쇄국 지향적·유교적 표현보다 ‘1871년 강화도 한미전쟁’이라 하면 어떨까 한다. 그런데 계량적 국제정치학자들은 500명 혹은 999명 이상의 인명이 살상되었을 때 전쟁이라고 칭하므로 그 미만이 희생된 이 사건은 전쟁으로 분류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다.

31) 로즈마리 풋이 그의 책 제목에 wrong war와 함께 사용했다.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미국에서는 6·25가 터지자 Korean Conflict라고 불렀다가 사태가 커지자 전쟁(War)이라고 불렀다.

32) David Halberstam,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 (New York: Hyperion, 2007).

33) Research Memorandum 52/39,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Records of Historical Studies Division, The Series Research Memorandums (Slash Series), 1946-1954 [A1 Entry 1468], Lot File 87D236, US National Archives. 한국전쟁이 대규모 국제 전쟁으로 비칠 것을 우려했던 트루먼과 미 의원들에 의해 War라는 단어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시 되었다. 많은 나라가 개입했던 한국전쟁이 World War III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와 서방의 대중들에게 한국전쟁이 '전쟁 같아도 전쟁 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를 축소시켜 지칭했던 것이다. 이 전쟁이 정치인들의 손에서 역사가들의 손으로 넘겨질 때 쯤, War라는 단어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34) Nam-lin Hur, "The Celestial Warriors: Military Aid and Abuse during the Korean War, 1592-98," A paper presented in UBC Workshop, February 10-11, 2012.

35) 오창엽, “역사추상형 접근방법, 해방공간은 열린공간: [강정구토론회3] 한국에서의 전쟁 War in Korea,” 『프로메테우스』, 2005년 10월 17일,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51017/20051017004900.html> (검색일 2010년 9월 7일).

크전쟁은 Iraqi War가 아니라 Iraq War로 불리므로 Korean War와는 달리 베트남인들의 전쟁, 이라크인들의 전쟁을 암시하지 않고 단지 지역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인들만의 전쟁을 포괄하는 것 같은 Korean War[한국인들의 전쟁]보다는 Korea War[한국전쟁]라는 표현은 그래도 낫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의 영역은 Korea War이며 Korean War의 국역은 ‘한국인의 전쟁’[혹은 ‘한국의 전쟁’]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전쟁’의 더 정확한 영역은 Korean's War, 한국인들의 전쟁은 Koreans' War으로 본다면 Korean War의 Korean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Korea]에 대한 형용사형[Korean]일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전쟁이라는 번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능성은 적다. ‘한국에서의 전쟁’의 보다 정확한 영역은 War in Korea이다. 베트남인들이나 이라크인들은 미국인들이 세계에 전파한 명칭인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Kháng chiến chống Mỹ(반미항전),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반미구국항전)이라는 베트남[민족주의]식과 Chiến tranh Việt Nam(베트남전쟁)이라는 미국식, Chiến tranh thống nhất [Việt Nam]([베트남] 통일전쟁)이라는 객관적 명칭, Chiến tranh Đông Dương lần 2(제2차 동양[=인도차이나] 전쟁)이라는 프랑스식 명칭을 모두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훗날 이라크의 역사가들은 자신의 땅에서 발생한 전쟁을 "2003 미국의 침략전쟁"같은 식으로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만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별 뜻 없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전쟁 명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선으로 그 전쟁을 보느냐”이다. 그렇다 보니 시선이 바뀌면 그 전쟁의 이름이 바뀐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은 타자적 이름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각에서는 한국전쟁이 아닌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이 관용화가 되어 바꾸기가 어렵고 글로벌 시대에 널리 쓰이는 Korean War가 공인된 용어³⁷⁾라면 어쩔 수 없지만 또 다른 관용적 용어인 6·25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안일 수 있다. 6·25전쟁이 국제전적 성격을 드러내주지 못하므로 한국전쟁이 더 적절하다는 서중석 교수의 의견³⁸⁾에 대해 필자는 ‘6·25복합전’이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6·25전쟁을 내전과 국제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합전이라고 규정했었다. 보다 정확히는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이다.³⁹⁾ 내전이나 복합적이냐는 논쟁에 대해 김일성은 남북내전으로 시작된 것처럼 가장했지만 북·중·소 3각이 모의한 결과 북방3각의 국제전(국제 공산주의혁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개입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전이 되었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물론 남북간의 전쟁이었으므로

36) 전병근, “김명섭 연세대 교수, “한국전쟁은 옳지않은 용어 6·25전쟁이라 불러야,” 『조선일보』, 2011년 6월 21일 A10쪽.

37) 그러나 일본도 조선전쟁이라고 하며, 중국도 항미원조, 냉전시대 소련도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조선에서 도발된 내란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라고 제각기 불렀다. И. Кравцов,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в Корее: 1945-1951гг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 1945-1951』 (Москва: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51); 민족문제연구소 (편), 『소련의 한국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4), pp. 210-211. 따라서 Korean War가 전쟁 당사자들과 주변국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이름은 아니며 미국과 서구에서 부르는 용어이다.

38)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개정증보판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3), p. 134.

39) 이완범, 「6-25전쟁은 복합전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학회 (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명인문화사, 2007년 1월), pp. 233-254.

내전적 기원이 없지 않았지만 만약 미·소간에 합의한 분할이 없었다면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외인론적 기원이 더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승태 교수는 6·25내전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은 서구인들의 주관적인 시각을 반영한 용어라고 평가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설정하는 작업이야말로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편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⁴⁰⁾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에서 각각 ‘조선전쟁’이나 ‘항미원조’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차용할 필요가 없듯이 미국 등지에서 the Korean War라고 적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⁴¹⁾

6·25를 중시하는 인사들은 영어명칭에 발발일자를 명기해 'The 6·25 War in Korea (1950-53)' 혹은 'The Communist War in Korea (1950-53)'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제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개정하기에는 위 용어가 다소 긴감이 없지 않다.

3) 6·25라는 용어의 시간적 제한성

한편 6·25는 전쟁 전기간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봉 교수는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 된 것이므로 ‘6·25’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루에 그친 것도 아닌데 북의 납침을 기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말이라는 주장이다.⁴²⁾ 1945년 9월부터 1950년 6월 이전에 이념 갈등과 투쟁 과정에서 10만 명이 희생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6·25’라는 이름에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공산 괴뢰군이 쳐들어 왔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⁴³⁾ 따라서 국제학계의 통칭인 Korean War에서 한국인들끼리 싸운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갈통식의 이름에다가 연도를 부기하는 “War in Korea, 1950-1953”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어로는 ‘한국에서의 전쟁, 1950-1953’ 혹은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1945-1953,’ ‘한국에서 일어난 6·25전쟁’이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에서의,’ ‘한국에서 일어난’이라는 말은 생략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1950년 전쟁, 6·25전쟁, 1945-1953년 전쟁 등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데 또다시 6·25전쟁으로 귀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40) 양승태, “보수주의라는 정치 현상과 보수주의 이념,” 『이상과 이상 사이에서: 민주화 시대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p. 251.

41)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 61.

42) 이재봉, “6.25 전쟁도, '한국전쟁'도 틀렸다: [이재봉의 법정증언] 분단의 원흉은 누구인가,” 『프레시안』, 2014년 9월 4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966> (검색일: 2014년 9월 27일).

43) 오창엽, “역사추상형 접근방법, 해방공간은 열린공간: [강정구토론회3] 한국에서의 전쟁 War in Korea,” 『프로메테우스』, 2005년 10월 17일,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51017/20051017004900.html> (검색일 2010년 9월 7일).

한편 1948년 이후 남한 내의 빨치산 투쟁과 1949년 38선 부근의 무력 충돌 등 전쟁은 1948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시각에 입각하면 6·25라는 명칭은 부족하다는 견해가 계속 제기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에 형성된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6·25전쟁보다 '한국전쟁'이라고 써야한다는 주장이다. 김명섭 교수는 이렇게 쓸 경우 전쟁도발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고 전쟁결정에 대한 반성의 여지는 없어진다고 주장했다.⁴⁴⁾ 김영호 교수는 북이 1949년 전쟁을 원했으며 1950년 1월 30일에 결정되었으므로 6월 25일에 갑자기 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⁴⁵⁾ 박명립 교수는 "6·25라는 용어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 삼아 단일의체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냉전시대 절대적 사유체계로서의 6·25 담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6·25에 비판적인 김 교수와 박 교수는 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⁴⁶⁾ '1948-1953년 전쟁'이 제3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한편 커밍스와 같이 교전쌍방에 대해 동등한 개진책임을 묻는 양비론에 대해 김명섭 교수는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이 미국이 지원하지 않았기에 실현가능성이 없었고 김일성의 국토완정 전략은 소련의 지원 아래 실제로 실현되었으므로 등가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⁴⁷⁾

박태균 교수는 남에서 주로 쓰였던 '6·25사변'과 북(과 예전 공산권)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통칭에 맞서 전쟁 당사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한국전쟁'이란 이름을 선호했다. '한국전쟁'이란 무가치한 이름이야말로 "이 전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⁴⁸⁾ 그렇지만 한국전쟁은 우리가 창안한 말이 아니므로 미국식 명칭의 번역어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김동춘 교수는 '6.25와 조국해방전쟁'으로 정리된 한국전쟁의 공식화된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6.25라는 남한의 전쟁 인식은 전쟁 발발을 기념하는 것으로 전쟁을 개시한 쪽에 대한 맹목적 증오감만을 부추기는 것이며(그러나 북에서도 진술한바와 같이 6·25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그 날짜를 북침개시일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6·25라는 명칭은 전쟁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만 보는 전통주의적 견해라는 비판은 적확하지 않다. 물론 그 명칭에 그런 정서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전체로 보는 것은 피상적이다. 한편 6·25이전에 전쟁이 배태되었으므로 이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내전론자들의 비판은 타당한 면이 없는 것

44)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p. 57-58.

45) 김영호,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 강규형 (외), 『청소년을 위한 우리 역사 바로 보기』 (서울: 성신여대 출판부, 2006), p. 234.

46) 박명립, 『역사와 지식과 사회(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과주: 나남, 2011). 한편 김영호 교수는 1998년에 두레에서 초판을 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개정판을 2006년 성신여대 출판부에서 재간하면서 제목은 그대로 했다. 그러나 김영호, 캐스린 웨더스비, 이재훈, 강규형, 나종남 (외 공저), 『6·25 전쟁의 재인식: 새로운 자료 새로운 해석』 (서울: 기과량, 2010)의 제목은 6·25전쟁이었다. 김영호 교수가 쓴 이 책 제1장의 제목은 "탈냉전과 6·25전쟁의 재인식"이다. 또한 김영호, "한국의 6·25전쟁," 문정인·김명섭 (공편),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에서도 6·25전쟁이라고 썼다.

47)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p. 58-59.

48)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 함께, 2005), pp. 8-9.

은 아니다),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전쟁 인식 역시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반역적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양 국가의 전쟁 인식에는 민족, 국민, 인민의 권리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넓은 범위의 한국전쟁이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2·7정치투쟁과 4·3항쟁, 여순사건 등에서 발생한 경찰·우익단체들과 민중들 사이의 폭력적인 충돌과 1948년 가을 이후 좌익이 주도한 유격투쟁에서 시작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를 ‘전면전 시기’라고 따로 지칭했다. 전면전 발발 전후의 시기는 6·25로 지칭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⁴⁹⁾ 따라서 김동춘 교수가 6·25전쟁이라는 표현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009년 6월 16일 이완범의 논문발표⁵⁰⁾에 대해 전인영 교수는 객석에서 6월 25일에 일어났을 뿐 한참을 경과했으므로 6·25는 문제가 있으며 한국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21개국이 참전한 것이므로 한국전쟁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통칭이 단힌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여겨져 ‘7년전쟁’으로 할 것을 결의해 1970년대 한때 교과서에도 실렸으나 통칭에 밀려 학계에서 퇴진했으므로 ‘3년전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육군 군사연구소 세계전쟁연구과장 김석구 대령은 2012년 9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학술회의장에서 세계에서 6월 25일 발발한 전쟁이 매우 많으며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이완범이라는 개인의 이름대신 ‘61년생 교수’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한 정용석 교수는 2009년 6월 16일 이완범의 논문에 대한 약정토론에서 “남침이나 도발이라는 언급은 한번쯤은 들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이 글은 외국인이 쓴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객관적이라고 일갈했다(이에 본 연구자는 ‘6·25남침’이라고 쓰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또한 김희철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6·25남침전쟁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⁵¹⁾ ‘6·25불법남침’이라고 쓰자는 제안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1950년 도발하고 21개국이 참전하여 1953년 끝난 전쟁”이라하면 될 것 같지만 이름으로서 너무 길어서 번거로우므로 어떤 식으로든 줄여야 한다. 또한 남북화해 시대에 남침이나 도발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 있기는 하다. 명칭에 명기하기보다는 전쟁의 성격에 북의 도발을 언급해 ‘(북이 도발한) 6·25전쟁’으로 처음 언급한 후 괄호 안을 생략하면 어떨까 한다. 실제로 남침이라고 명기하면 그것이 북의 남침인지 남쪽에서 [북으로] 침략한 것인지 젊은이들이 헛갈려하기도 한다고 한다(일부 젊은 세대의 설문조사에서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혼동의 산물일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최대한 객관에 가까워가려는 학문적 태도와 관점(투철한 국가관)을 투영한 태도가 양립할 수는 없을지 생각하게 한다.

49)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 pp. 19-24, 58. 김동춘 교수는 "6·25'라는 명칭을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북한의 '적화 야욕'을 경계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우리는 이제 이런 단세포적인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썼다.

50) 이완범, “6·25의 성격과 개선의 주도자,” 북한연구소-북한학회 2009년도 전반기 학술회의: 6·25를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한다, 2009년 6월 16일, 32-52쪽.

51) 김희철, “6·25를 6·25남침전쟁이라고 부르자,” 『조선일보』, 2012년 6월 21일.

4. 6·25전쟁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6월 25일 이전(국지적인 내전)과 이후(전면전)는 갈등의 수준이 급격히 전환되었으므로 우리들 머리 속에 전쟁이라고 기억되는 것은 6월 25일 이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는 6월 25일 ‘미제가 도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쟁의 시간을 지칭하는 객관적 명칭인 6·25전쟁이 남의 진보적 학자들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가치중립적이다. 국제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을 선호하지만 위와 같이 6·25전쟁이라는 명칭이 당시 일어났던 갈등의 상당부분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어떨까 한다. 미국 등 다른 외국인들이 6·25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6·25전쟁’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1950년 한국에서 일어난 6·25전쟁’이라고 설명해 주면 될 것이므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전지구적으로 글로벌화하고 있는 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로컬한 명칭인 6·25전쟁보다 ‘코리안 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 학자들이 더 용이하게 받아들일므로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명칭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의 대안으로 ‘코리안 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2004년 장관의 내부결재에 의거해 6·25전쟁 명칭 사용을 결의했다고 한다(게다가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임진왜란 대신 ‘조일전쟁,’[이는 명나라의 파병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그 한계가 있다. 그러나 6·25전쟁·한국전쟁에도 미국의 참전이나 중국의 개입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짧은 이름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꼭 그래야만 할 필요는 없다] 병자호란 대신 ‘조청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의 한국전쟁(혹은 북의 조선전쟁)이나 남북의 6·25전쟁이라는 용어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말보다는 본질과 내용을 심각하게 편향시키지는 않는다. 한반도에 대해 조선이나 한국이라는 말 중 어느 쪽은 선택했다고 해서 정치적 시각차이는 있을지라도 지칭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정치학계가 주로 통용하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와 역사학계·경제사학계에서 주로 통용하는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것에 심각한 소통 문제는 없을 것이나 6·25전쟁이라는 부르는 통례가 더 나은 명칭이라는 주장이 국내학계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색한 이름으로 명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용된다면 바꾼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명명의 정치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형식에 너무 집착해 중요한 것(내용)을 놓치는 소모적인 논쟁만을 양산할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간결하고 완벽한 명칭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칭에 주목하는 것인 실용적인 태도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보다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사건의 의미를 반추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용어를 인위적으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 나라가 다원사회라면 그 나라 안에서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른 命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학계에서 통용되는 외래명 한국전쟁을 굳이 금지어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5. 또 다른 용어의 문제: 정전이나 휴전이나

포화가 멈춘 지 60년이 되는 2013년의 시점에서 정전이나 휴전 중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영어본을 저본으로 한국어본을 만들면서 Korean Armistice Agreement라는 제목을 ‘한국휴전협정’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문 of armistice는 정전, cease-fire는 정화로 번역했다.⁵²⁾ 대한민국에서는 북이 만든 용어인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을 선호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김명섭 교수는 북이 ‘짧은 정전’ 후 전쟁재개를 노렸던 반면 유엔군 측은 ‘긴 휴전’을 원했다고 해석했다.⁵³⁾ 그러나 박태균 교수는 정전은 전투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며 휴전은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라면서 국제법상 휴전은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전이 평화에 더 가까우므로 정전이라고 쓸 것을 주장했다.⁵⁴⁾ 그렇지만 당시 미국은 정화(cease-fire)와 armistice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truce라는 용어도 역시 별 뜻 없이 혼동해서 사용했다. 따라서 이 세 단어의 차별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停火는 “쌍방이 잠시 전투행위를 중지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armistice는 “정화를 포함한 전면적이고 보다 장기적인 군사행동의 정지”를 가리킨다. 물론 armistice보다 장기적인 것은 講和이다. 또한 평화공존 상태로 전환하여 모든 전쟁흔적과 전사의 영향과 상흔을 제거하는 것은 평화협정이후의 체제(평화체제)라고 할 수 있다.⁵⁵⁾ 따라서 단기적인 것부터 나열하면 cease-fire->armistice->pacification(강화)≥peace-making(평화구축)의 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한편 김명섭 교수는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p. 65-66에서 armistice를 휴전이라고 번역한 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

52) "한국휴전협정," 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국방조약집』, 제1집 (1945-1980)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 124-127.

53) 그런데 이는 1951년 12월 3일 정전협상 제34차 본회의에서 유엔사령부측이 공산측의 태도를 “it is clear that NK does not want armistice but a total cease-fire to permit increase in NK military capability at will”라 평가한 데서 근거한 것이다. 김명섭, “6.25전쟁 정전협정과 휴전체제의 재조명: 영구적 평화체제의 모색,” 전쟁기념관 공개학술회의 발표문, 2013년 6월 27일, p. 5 각주 9번. 그런데 당시 공산측이 군사력 강화를 도모해 전쟁의 재개를 원했는지 모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되면서는 소모전을 빨리 끝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휴전협정조인에 반대하며 북진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이승만이였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상호방위조약 등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한 구호이자 위협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따라서 쌍방이 모두 속으로는 긴 정전, 긴 휴전을 원했다고 할 것이다.

54)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 73호 (2005년 겨울), pp. 89-90. 그런데 정전은 국제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진 것이며 휴전은 아닌 경우라고 평가했는데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 (2008), p. 168에 의하면 휴전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 등 제3자 개입의 결과인 데 비해, 정전은 교전 당사자 상호간의 직접 협상의 결과라고 정반대로 주장되었다. 한편 전미영,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화 가능성과 전제조건,” 이서행 (외), 『분단 재조명: 대립과 갈등을 넘어 통합·번영방안』 (서울: 백산서당, 2009), p. 256에서는 정전을 armistice, 휴전을 truce로 보면서 두 용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되었다.

55)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p. 66-68.

다보니 남한에서는 휴전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었으나 정전협정에서 armistice가 정전으로 번역되었으니 정전이 바른 용어라고 주장했다.

6. 맺음말

정전협정이 정전체제를 구상하는 이상주의적 기제였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현실주의적 기제였다. 또한 이 조약에 기반한 정전체제는 ①공산진영의 재침, ②이승만의 돌발적 군사행동[북침], ③미국의 후원으로 부활하고 있는 일본 우익전체주의 3자를 막거나 견제하기 위한 3중적 봉쇄체제였다는 것이다.⁵⁶⁾

정치적 화해를 위해 역사적 진실을 덮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정치적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⁵⁷⁾는 저자의 문제제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공주의의 도그마와 함께 반반공주의적 도그마를 함께 비판하는 저자의 입장⁵⁸⁾도 역시 균형감이 돋보인다.

56)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 10. 그런데 마지막 일본에 대한 봉쇄는 이승만이 추구했던 것으로 미국의 구상과는 괴리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에 의한 북·한봉쇄, 미국에 의한 한국의 북진제어, 한국에 의한 일본건제로 정리하면 어떨까 한다.

57)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 11.

58)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p. 11-12.